

# 데스크시각

김재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수원 화성으로 향하던 어가행렬이 언덕길에 잠시 멈춰 서자 정조는 주위 사람들을 채근했다. "아버지마에 게 가는 길이 왜 이리 더딘가(遲遲)"라고. 지금의 경기도 의왕시와 수원시 경계인 이 고갯길은 이때부터 지지대(遲遲臺)로 불리게 됐다.

정조 대왕이 뜨고 있다. 200여년 만에 뮤지컬과 연극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돌아왔고 당시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와 영화 2편도 이르면 올 하반기 선 보일 예정이다.

좋은 정착, 정조는 제 2의 창업에 성공한 제왕으로 평가된다.

정조는 통합과 공존의 정치를 실천했다. 사도세자를 탄핵했던 노론 측 인사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포용했

## 정조대왕과 성공한 대통령

다. 그가 추구했던 개혁정치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과격적 수준이었다. 말년에 공노비를 해방시키는 등 신분 타파를 통해 평등사회를 추구하기도 했다.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 되던 해 정조는 사도세자 묘소를 화성으로 옮기면서 신도시 건설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부친에 대한 효심을 내세웠으나 기득권 세력의 중심지였던 서울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 통합과 공존 실천한 정조

정조가 새삼스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지극한 효심 때문만도,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 역경 때문만도 아닐 것이다. 왕조 통치는 기업 경영에 비유할 수 있다. 흔히 태종은 수성, 세종은 창조, 성

수원성 설계와 공사는 다산 정약용과 같은 실학과 학자들에게 맡겼다. 정조의 야심찬 포부와 새로운 시대정신이 결합해 만들어진 18세기 문예부흥기 걸작품이 바로 수원성이다.

정조는 화성을 상업과 농업 중심지로 만들어 국가발전의 견인차로 삼으려 했다. 주민에게 이주비를 지원하고 10년간 면세 혜택을 주었다. 서울의 부호들에게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1천 냥을 빌려줘 주택사업을 벌이게 했다.

우리나라 역사 인물 가운데 정조만큼 소설이나 사극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경

우도 드물 것이다. 세종을 능가하는 개혁 군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절대군주양상으로 다시 한번 80년 광주 5·18에 대한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예몽군주인 프리드리히 대왕과 견주는 학자도 있다.

선거절이나 새 정부 출범 직후면 오래 현직 대통령들이 정조와 비교되고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학다식하고 국정을 직접 챙기길 좋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정책이 정

조의 광명책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성공한 대통령에 대한 갈망

정조와 관련, 가장 자주 거론된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개혁을 주창하고 수도이전을 추진한 점 등만 놓고 보면 일견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아쉽게도 참여정부의 지난 4년간은 정조의 상생정치와는 궤를 달리했다.

정조대왕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념과 노선 대립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 현실이 200여년 전의 성군을 갈망하는 것은 아닐까.

140여일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과 정파 간 이합집산이 한창이다. 개혁이나 혁신은 이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저마다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개혁을 외치기는 쉬워도 실현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대선의 해를 맞아 정조대왕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과 포용력까지 갖춘 지도자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볼 일이다.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 시설

### 과거사위 5·18진상조사 기대 못미쳤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24일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 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발표 명령자, 실종자 암매장, 미국의 역할과 같은 핵심쟁점의 실제 규명에는 실패했다.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조사권이 없는 과거사위의 5·18 진상 조사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조사를 거부하면 달리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해동 과거사위 위원장도 권한의 한계 등으로 조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럼에도, 과거사위의 이번 조사는 몇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사위는 발표 명령자에 대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실명을 명기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발표 명령자

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 주화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자위권 발동 주장과 발표 명령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는 향후 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조준사격 등 그동안 심증만 가지고 떠돌던 얘기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도 긍정적이다.

과거사위의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5·18 관련 기록은 영구보존하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군이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핵심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권이 있는 기관의 추가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대한 사실 규명 없이는 미래 발전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병원장 모시기'에 나선 국립 소록도병원

국내 한센인 치료의 메카인 국립 소록도병원장이 5개월째 공석 상태다. 김중원 전 원장이 지난 2월 병원 개업을 위해 명예퇴직한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손길이 아쉬운 현실에서 병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보건복지부는 부이사관 이상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병원장을 물색했으나 희망자가 없었다고 한다. 한센병에 대한 편견과 수도권에서 6시간 이상 걸리는 교통불편, 공무원의 낮은 보수 등이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병원장만 빈 것도 아니다. 의사 정원은 6명이지만 근무를 기피해 2명만 근무하고 있다.

오죽하면 보건복지부가 외부에 문호를 개방, '병원장 모시기'에 나섰을까. 보건복지부는 민간인에도 문호를 개방, 보건복지부 내·외부 지원자 중에서 병원장을 채용키로 했다. 소록도병원장을 외부에 개방한 것은 1996년 26대 김윤일 원장

에 이어 두번째다. 고흥 소록도병원에는 현재 한센병 환 64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평균 연령이 73세에 달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연로한 환자들이 외로운 섬에서 힘겹게 투병을 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에게 무조건 회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타계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같은 의사들도 있다. 이 박사는 의대 재학시절부터 국내의 환자를 가리지 않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데 몸을 던져 '21세기의 슈바이처'로 불렸다.

이번 소록도병원장 공모에 이 박사처럼 회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사들이 몰려들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면접을 거쳐 다음달 새 병원장을 임명할 방침이다. 단순한 의학(醫術)보다는 인술(仁術)을 펼치는 의사들을 보고 싶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은펜칼럼

김병인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은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OECD에서도 부존 자원도 부족하고 자본도 없는 한국이 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45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었을 때, 전국에 단지 1개 대학과 25개 전문학교가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철저히 우리 민족에게 우민화 정책을 실시하여 인구 1천 명 당 대학생 수를 1명 미만으로 제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정권을 잡은 이승

되어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을 이끈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전국에는 173개 대학과 158개 전문대학이 있다. 광주·전남에도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8개 대학과 17개 전문대학이 있다. 양적으로 많은 성장이 되었다. 인구의 구성 비율로 보아도, 전체 대학수의 10%를 넘고, 특히 광주는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가 넘어 교육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 전남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다. 이래서

###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기업이 나서야

만 정부는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당시 GNP 대비 교육 재정 예산이 6% 정도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았다.

우선 양적인 성장을 중시하여 정부는 정부대로 국·공립대학을 민간은 민간대로 많은 사립대학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 미래에 대비하여 각 대학들이 특성화 하도록 하였다.

연세대는 상대와 의대를 특성화하여 기업인과 의사를 양성하고, 고려대는 법과대학을 특성화하여 법조인을 양성 하도록 하였고, 한양대와 인하대는 공과대학을 특성화하여 공업 기술인을 양성하고, 한국의국어대는 외국어를 특성화하여 상사의 해외 주재원과 외교관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건국대 축산과, 춘천 농대 등 많은 대학들이 해방 후에 설립되어 현재 명문 사학으로 성장하였다.

여기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유학도 가고, 1960~70년대에 산업 현장에 투입

는 안 된다.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인재는 지역의 기업이 앞장서서 양성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산학 협력으로 직접 육성하는 '주문식 맞춤형 교육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 자금 지원을 하고 대학은 교육을 담당하여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선점할 수 있어서 이 제도는 더욱 확대 시행 될 것이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교육 재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을 비롯하여 고교 단계에서의 산학 협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 협동을 자주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한다면, 지역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교육의 질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애항심을 가진 지역 인재를 양성 할 수 있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지역 기업의 교육 재정 지원 확충을 바란다.

〈서강정보대 교수·2006년 4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초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위험물 운반 차량 안전운행 수칙 철저히 지켜야

최근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LP 가스통을 운반하는 트럭이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할 뻔한 일이 있었다.

LP 가스통 수십개가 실려져 있는 트럭과 충돌했을 경우 자칫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도로상에서 액화천연가스나 독극물, 약

품, LP가스통을 운송할 때는 안전운행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또 허용된 양보다 훨씬 많은 가스통을 실어 나르는 운전자도 많다.

경찰은 위험물 취급 운전자들의 불법 운행을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

▲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 기고

진헌성



나는 광주에서 출생, 일흔 여섯해째 살고 있다. 요즘 5·18을 주제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가 개봉되면서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80년 광주 5·18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듯 하다. 5·18은 독재 정부가 이에 저항하는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 슬픈 역사다. 광주 시민들이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항거해 마침내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루게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다.

그런데 요사이 그 순수했던 5·18이 기묘하게 비틀리고 특정 세력에게 이용 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당시 피흘리는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민주화가 이뤄진 다음부터는 대부분 조용

을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사회개혁운동이나 독립 운동이나 애국심과 의문의 발로가 아니라. 의협심으로 일어났을 뿐, 후일 공로를 내세우기 위한 동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란 명예욕과 사심에 흔들리게 마련이어서 세월이 흐를수록 5·18을 훈장처럼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즈음 우리가 보는 것 처럼 5·18을 순수 추모일로 보내지 못하고 도청앞 광장에 놀이마당을 만들어 놓고 고성능 확성기와 조명무대까지 설치해버려 몇날 며칠을 떠돌이 아니라고 본다.

### 광주시민, 이젠 제자리를 찾자

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명예회복도 되었고 일반인들은 금전적 보상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만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의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죄다 5월 영령의 뜻이라며 억지로 갖다 붙여 구 도청앞 광장을 점령한다. 참 탐탁찮은 것이다.

나는 27년전 당시 내가 운영하는 병원이 전남도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5·18의 진행과정을 하루하루 두 눈으로 목도했다. 당시 시위대 중에는 시내버스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군중을 지휘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당시 그 청년은 화를 당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광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청년이 장년이 되어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 왈, "이젠 5·18을 들먹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대다수 보통 시민들의 마

사실 구 도청 근방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27년간 제2의 희생자였다. 독재정부시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지는 투석 시위와 최루탄 세례속에 고통을 묵묵히 참아왔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각종 집회로 차량통행이 막히기 일쑤여서 말못할 고통을 겪어왔다. 이러다보니 도청주변 시민들은 좀더 단단한 5·18에 넉더리를 내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좀더 내실을 기했으면 한다. 광주시 당국자들은 내년 5월 부터는 난비성 집회를 대폭 생략하고 순수 추모 행사로서의 5·18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 이제 광주시민들은 천둥에 개 휘두르는 세상에서 벗어나 차분히 자기를 돌보며 27년전에 '산 자'의 일을 해야 한다.

무슨 개혁이다 혁신이다 하며 요란하게 선동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나부터 질서와 법을 지키고 사회 공중 선을 위해 실천해가는 고급한 시민들이 되어야 한다.

〈진내과 원장〉

### 광주일보를 읽고

### 전남 농·축산물 브랜드화로 FTA 파고 넓자

광주일보 7월 20일자 10면 '전남산 브랜드 한우 수도권서 인기 급상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농촌이 FTA로 시름에 잠겨 포기하거나 실망만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농촌의 노력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도시민들의 농촌 돕기 노력 등 3박자가 맞으면 외국인 농산물의 공세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전남도 지역의 질 좋은 신도불이 농산

물의 우수성을 전국 시장에 홍보하고 마케팅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

현재 최고가는 미국 호주산이 쌀값을 무기로 전국에 팔려나가고 있는데 지리산 순한우가 여기에 맞서서 경쟁을 펼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제 전남산 브랜드 한우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유기농, 무농약으로 특화 재배해 국내 및 수출 시장에서의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권정애·순천시 기곡동

## 無等鼓

기업들의 시장독점 행위를 뜻하는 경제용어로 카르텔, 트러스트가 있다. 카르텔은 라틴어인 카르타(charta)에서 유래했다. 카르타는 중세 유럽 교전국 단 문서상 휴전협정을 지칭했으나 산업화 이후 기업간 휴전의 의미로 쓰이면서 카르텔로 바뀌었다. 트러스트는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카르텔과 비슷하나 기업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형태이다.

최근 국내 유명회사들이 밀가루, 설탕, 설탕 등 대표적인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사실이 적발돼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963년 터진 '3분(三粉) 폭리 사건'에 걸려 '신삼분(新三粉) 사건'이라 명명하며 흥분한다.

삼분사건이란 1963년 시멘트와 밀가루, 설탕 등 3개 품목을 생산하는 소수의 독과점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 폭리를 취했던 사건이다. 당시 밀가루 업체들은 담합으로 가격을 3배까지 인상, 폭리를 취했다. 설탕과 시멘트 업계도 3~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올렸고 세금까지 포함했다. 이

로 인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과점 문제가 관심을 끌게 됐고 결국 공정거래법까지 탄생시켰다.

공정위는 작년 3월 밀가루 물량과 가격을 포함한 관련 8개 업체에 수백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10월에는 세계 가격을 포함한 4개사를 적발, 의법 조치했다. 이어 올 7월 기업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점에서 보다

발했다. 작년부터 관심을 모아왔던 3대 생활필수품 담합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받고 고발도 피해 '자진신고자 감면제 악용'이라는 문 제점을 드러냈다.

기업들은 장기간 치밀한 수법으로 가격 인상, 물량 조절을 해왔고,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아 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들은 과징금이 과하다는 불만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가가 할 노릇이다.

제도 보완, 일벌백계로 '소비자는 왕'이라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때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 新三粉 사건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光주시가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사업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경제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광 2부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